

‘변화폭 얼마나?’ 총경 승진인사 지연...광주·전남경찰 뒤송송

이태원 참사 후폭풍, 고위직 인사 보름이상 늦어져
 ‘경찰의 꽃’ 일선 지휘관 총경 인사 놓고 설왕설래
 복수직급제 확대·순경 출신 중용 여부에 관심 쏠려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인사를 앞두고 광주·전남경찰 분위기가

뒤송송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복수직급제 확대, 일반직



‘설경 산책’

광주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광주 동구 푸른길 공원에서 시민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순경) 출신 고위직 비율 확대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인사 결과를 놓고 승진대상자는 물론이고, 조직이 들쭉인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상 매년 12월 중순께 경무관(일반 공무원 3급 상당)과 총경(4급 상당)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지만 올해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무관 인사는 12월 23일, 총경 직급은 12월 30일 승진 예정자가 발표됐다.

해마다 앞서 발표했던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가 보름 이상 늦어지면서 일선 지휘관인 경무관·총경 인사 역시 올해는 안갯속이다.

경찰 내 서열 4위인 경무관은 다면 평가 등이 진행 중이지만, 총경은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승진대상자 명단 제출 이후 진척이 더디다.

경찰 고위직 인사 지연의 배경에는 이태원 참사 후폭풍이 자리한다. 치안정감 직급 보직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관련 수사선상에 놓였고, 국회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도 경찰청·서울경찰청이 나란히 올랐다.

경찰 인사 제정권을 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어수선한 정국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경무관·총경은 지방경찰청 내 주요 지휘관을 맡는 직급인 만큼, 광주·전남경찰청 안팎도 인사를 둘러싼 말이 무성하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복수 직급제’ 확대 여부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책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일선 경찰서까지 넓히기로 했다. 통상 서장을 맡는 총경이 경정 보직인 일선서 각 부서 과장직에도 임명될 수 있다.

그만큼 인사 규모가 커질뿐더러, 경찰대 또는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했던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수직급제’를 확대하면 승진 인사에 걸린 총경 자리는 2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선 총경 승진이 100명 남짓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보다 힘이 실린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화두다.

행안부는 순경 출신이 총경·경정·경감급부터 꾸준히 기용돼야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며 정권 교체 이후 첫 총경 승진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승진심사기준도 개정했다.

특히 정부가 경찰대학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조직 안팎에선 비경찰대 출신의 약진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정권 실질적 행사’를 공언한 것도 거둬 화자 되고 있다.

지역 내 한 승진대상자는 “피가 바짝 마르는 기분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인사기도 하고 예년에 비해 인사에 영향 줄 요인이 하도 많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말만 무성할 뿐, 총경 승진 인사 폭·방향 등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또 다른 경쟁은 “전체 승진 인사의 30%만 경찰대 출신을 안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예 임용 출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도 돈다”며 “일각에선 ‘출신을 떠나 행안부 줄만 잡으면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나온다”고 했다.

순경 출신 총경급 승진 대상자는 ‘복수직급제 확대는 조직의 숙원이니 꼭 반영되길 바란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사를 (출신에 따라) 안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한 직원은 “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 쏠린 눈이 많다. 상관의 영전을 기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침이 어떤지 가능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며 “유난히 어수선한 연말 인사철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총경 승진에는 2012년 경정 승진자부터 2015년 경정 발탁 승진자들이 각축을 벌인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 두 경찰청을 통틀어 연말 총경 승진자는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이었다.

인사 적체·승진 정원 등 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광주청에선 ‘2명+α’ 또는 ‘3명+α’ 꼴로 승진자가 나왔다. 전남청도 매년 평균 2~3명 이상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김재환기자

‘술 없는 점심 회식’...거리두기 해제로 3년만 송년회 부활

4월 거리두기 해제, 대면 연말 모임 늘어
 회식 간소화 문화 익숙해져 소규모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광주·전남 곳곳에서 연말 단체 모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임을 간소화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송년회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소규모 모임으로 진행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지난 16일 낮 광주 서구 백반집에 서구청 공무원 8명이 송년회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연말 행사다.

공무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양제·우산 등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나눴다. 술 대신 음료수 잔을 부딪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부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규모 송년회 대신 점심 모임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다.

한 경찰 공무원은 “감염 우려와 이태원 참사가 맞물려 연말 술자리를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복직하는 전체 회식 대신 팀 단위의 소규모 회식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티룸을 빌려 소규모 모임을 하는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지인 3~4명과 성격 유형(MBTI)이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

증 사진을 찍거나 요리를 직접 해 먹으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술집과 식당가도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단체 손님이 부쩍 늘었다. 5인 이상 모임 제한(2020년 말)과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에 따른 행사 위축(지난해 말) 국면과 달리 올 연말 모임이 방역 당국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리면서다.

한정식집 직원 김모(35·여)씨는 “가족·회사·계·상견례 모임을 하려는 15명~20명 단위의 손님 예약도 들어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 연말과 비교해 아르바이트생과 식재료 주문량을 각 두 배 늘렸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